



[금융]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키워드는 '고객 가치'" 08



Life

[공기업] 코레일·인천공항·NH 사장 누구 L4



2022년 '스마트 도시', 서울의 모습은?

미세먼지·소음측정... 500종 도시데이터, 시민 삶 속으로

양천구·성동구 테스트베드 특구 센서 5만개 설치해 데이터 수집 도시데이터 통합해 정책에 활용

서울시가 양천구와 성동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구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달말 양천구·성동구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2년에는 서울 시내 전역에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시는 향후 4년간 시내 곳곳에 도시데이터 센서 5만개를 설치해 데이터를 수집,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 도시데이터 센서는 미세먼지, 소음, 빛 공해, 온·습도, 풍향·풍속, 차량 속도 등을 측정하는 기계로 가로등과 보안등, CCTV 지주,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다.



서울시가 이달 말 양천구·성동구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유투이미지

시는 센서를 통해 소음을 측정, 허가 시간 외에 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최적의 위치에 방음벽을 세운다. 동별 폭염·한파 지도를 제작,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곳에 그늘막 또는 빙판길 열선을 설치한다. 서울 전역의 전자파 지도를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 영유아 시설에서 전자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야간의

빛 데이터를 추적해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151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2022년까지 492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측정하는 센서는 연내 1만3000개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5만개로 늘린다.

도시현상을 데이터화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공공정책을 수립·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유통을 활성화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 사업은 ▲스마트 도시데이터 시스템 구축 ▲공공 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22년까지 총 530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우선 시는 연내 도시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제별 분류 체계를 만든다. 2021년부터 시행 행정정보시스템 전체 468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까지 공공기관, 데이터 제공 기업이 함께하는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컨소시엄'(가칭)을 출범한다. 생활인구, 미세먼지 등 활용 가치가 높은 빅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고, 이를 가공·분석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오는 2021년

부터 기업 활동과 창업 지원용 빅데이터, AI 기반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는 2020년 전면 개방된다. 시는 지난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동경로, 교통상황 예측 실시간 데이터 등 80개 정보 시스템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 상수도 수질 측정, 건물 DB 등 170개 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 2020년에는 스마트카드, 민원상담 등 비식별화가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한다.

그동안 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심야 버스 운행 노선 조정,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SNS에 게재된 불법대부업, 다단계 판매 광고를 식별해내는 인공지능 수사관을 민생범죄 수사에 도입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468개의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도시데이터를 정책에 활용, 행정에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전자치구로 확대

서울시 교육청과 2단계 업무협약 체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모델 발굴·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 공동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양육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발굴해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지·지원하는 자치구다.

2015년 11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22개 구로 확대됐다. 올해 강남·송파·중랑구가 참여하면서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1단계(2015~2018년)에서 마을-학교 연계 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학



교의 변화(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접목한 학교교육과정 개선) ▲마을의 변화(청소년방과후활동 기반확대) ▲교육 거버넌스 구축(민·관·학 협력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교육 사업 추진)을 이뤄왔다. 2단계(2019~2022년)에서는 민·관·학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모든 혁신교육지구에서 수행해야 했던 필수과제를 없애고 자치구별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는 자치구 당 평균 15억원(시 5

억, 시교육청 5억원, 자치구 5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자치구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배움과 섬을 지원한다.

서대문구에서는 토요일마다 동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해 '토요동 학교'를, 영등포구는 문래창작예술촌 등 지역 거점 공간 20여곳에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했다. 구로구 청소년들은 학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청소년축제를 직접 기획해 운영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문 협력모델로 2015년 첫발을 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는 2단계 도약을 시작했다"며 "아이들이 '맑고 삶'을 즐겁게 배우고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 25개 자치구가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기온이 푹 떨어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희궁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있다. /연철뉴스

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단속 나선다

22일부터 연말까지 합동 단속 실시 고광도 전조등 등 불법 튜닝 가장 많아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자동차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자치구·경찰 등 관계기관과 시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 단속도 병행한다.



불법 개조 자동차 단속 모습. /서울시

시는 지난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650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 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

장 많았다.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가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는 불법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차량도 합동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최초 역학조사관 임명

감염원인 파악, 확산 막는 전문가 소아과 전문의 김준재 조사관 임명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역학조사관'이 경기도에 정식 임명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감염병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전문가로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현재 활동 중인 6명의 수습 역학조사관 중 1명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충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아과 전문의인 김준재 조사관(59세 의무5급)을 지난 9일 역학조사관으로 정식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간 교육은 물론 3주간의 기본교육(1회), 6회의 지속교육(각 3일 이상)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밖에 도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 발표를 진행해야 하며,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와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를 각각 2편 이상씩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대다수 시·도에서는 2~6명의 수습 역학조사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정식 역학조사관은 이번에 임명된 김 조사관이 처음이다. '역학조사관'은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등 의심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의심환자를 즉시 분류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정감염병 유행 차단 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이 사무관은 수습 역학조사관이었던 지난해 메르스, 홍역, 백일해 등 감염병 발생 당시에도 5명의 동료 수습 역학조사관들과 함께 의료기관 등으로 출동해 감염원 추적 등 현장을 지휘,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